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강 명 실
사계절출판사 대표

“꽃할머니, 저번에 말린 꽃은 어떻게 됐어요?” “아주 예쁘게 잘됐어. 등에서 국화꽃을 또 한 움큼 꺾어 왔지.”

꽃할머니는 꽃누르미를 하신다. 일주 일에 한 번 원예지료사가 찾아와 할머니를 도와 드린다. 꽃할머니 얼굴은 두 가지다. 시무룩한 얼굴과 활짝 웃는 얼굴. “웃어 보려고 해도 웃을 일이 없어. 뭐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이 있어? 좀 뽀죽 웃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꽃 이야기를 할 때면 늘 활짝 웃으신다.

‘꽃할머니’란 그림책의 첫머리이다. 꽃누르미를 잘해서 꽃할머니로 불렸던 이책의 주인공 심달연 할머니는 암 투병 중의 몸으로 2010년 6월 책 헌정식에 참석한 후, 같은 해 12월 돌아가셨다.

꽃할머니가 열세 살 무렵, 언니와 함께 등에서 나물을 캐고 있는데 갑자기 두 남

열세 살 적 꽃할머니를 떠올리며

자가 나타나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강제로 트럭에 태웠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며칠을 갔을까, 낯선 나라에 내렸다. 한쪽으로 강이 흐르고 산비탈에 막사가 있었다. 막사 안에 칸칸이 들어 있던 작은 방 하나에 구겨 놓여진 꽃할머니는 그날부터 방 앞에 줄을 선 일본 군인들을 차례차례 온몸으로 받아 내어와 했다. 하루에도 몇 명인지 셀 수 없는 그들. 반항하다가 관리인이 던진 칼에 무릎 안쪽이 찔러지기도 했다. 정신을 잃은 날도 많았다. 전쟁이 끝나자 그들은 할머니를 버려두고 떠났다.

한국의 어느 절에 누구의 손에 의해 말겨졌는지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한다. 우연히 그 절에 불공드리러 온 여동생과 기적처럼 만나 고향으로 돌아온 꽃할머니는 술한 세철을, 일본 군인들에게 폭행당하는 고문 같은 꿈을 꾸며 고통 속에서 보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답을 쌓은 채, 50년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꽃할머니의 아픔을 들으니 온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열면서 꽃누르미를 시작했다. 꽃누르미 작품으로 상을 받을 정도로 할머니 쏘씨는 뛰어나다.

1940년, 열세 살 나이로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던 심달연 할머니의 이야기가 다. 심달연 할머니는 강제로 트럭에 실려

간 이후 다시는 언니를 만나지 못했다. 심달연 할머니의 언니처럼 대부분의 ‘위안부’는 일본군과 전쟁터를 함께 옮겨 다니던 중 죽거나, 전쟁이 끝난 후 그대로 버려져 일본·대만·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의 낯선 땅에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되었다.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용감하게 ‘일본군 위안부’ 증언에 나섰던 238분의 할머니 중 이제 46분의 할머니만 생존해 계신다.

일본은 이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그들의 추악한 역사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자국의 역사 교과서를 거짓으로 덧칠하고 적반하장의 망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일본이 기다린 건 역사를 지울 시간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역사를 다시 현재 속으로 불러들여 진행형으로 형상화한 ‘평화의 소녀상’이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법적 배상, 가해자 처벌 등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여러 나라에서 통과시키자 일본이 불편한 한 건 무엇이었던가. 오로지 자국의 국제적 위신에만 급급해하지 않았던가.

중국을 견제한 한·미·일 공조 체제 강화를 위한 미국의 입김에 의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것으로 일본은 ‘위안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표명했으니 앞으로 더 이상 한국은 ‘위안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행동도, 조치도 취하지 말라는 명령과 다를 게 무언가.

식민지 지배와 대규모의 전쟁범죄에 대해 지금까지 국제적 사과 한마디 없는 일본, 전쟁범죄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인권유린이 ‘위안부’ 아니던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빠진 협상, 일본의 국가적 책임이나 진정한 사죄가 빠진 하울썬인 형식적 합의, 가해국이 오히려 피해국을 향해 ‘위안부’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듯한 명령의 그림자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합의, 이게 도대체 합의인가. 졸속으로 합의를 하게 된 계기와 불온한 저의가 미심쩍기 그지없다.

정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도 변함없이 추진해야 한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합의 무효화를 외치며 연일 집회를 여는 시민들과 할머니들과 시민들의 분노에 찬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책 헌정식 때 봉헌색 치마저고리를 곁게 차려 입고 마냥 부끄러워하던 꽃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리자나. 그분의 열세 살 적 해맑았을 미소가 꽃처럼 피어나다.

社 說

빛더미 뻥한 여수 경도 골프장 타산지석으로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투자 유치 실패로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경도골프장 처리 문제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문제가 한 돌이 아닌 데다 부채 감축을 위한 골프장 매각 또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경도 골프장은 시작부터 주먹구구식이었다. 전남개발공사는 회원권 100% 분양을 선불리 예단하고 혈세로 메워야 하는 지방채 1800억 원을 무리하게 발행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전남도는 면밀한 대책 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승인하며 맞장구를 쳤다.

골프장 조성에는 2016년까지 모두 4095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사업비는 회원권 분양(1399억), 골프 빌라 분양(1908억), 기업연수원 및 테마파크 부지 등 토지 매각(608억)을 통해 3915억 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하지만 골프 빌라·테마파크는 부지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상태다.

급기야 운영 방식을 대중제로 바꾸며

수습에 나섰으나 이미 얼얼해진 물이었다. 회원권이나 빌라 분양대금으로 빨리 빚을 갚기는커녕 그나마 골프장에서 나오는 운영 수익으로 장기간 총당할 처지여서 전남도 재정을 옥죄는 큰 애물단지가 됐다. 사태가 커지자 전남도는 골프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덩치가 너무 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도 골프장은 공기업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준 사례다. 치밀한 검토 없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포화 상태에 접어들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골프장을 주력사업으로 선택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순쉬운 방편으로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해 결국 책임은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

지자체의 행정 편의를 등에 업고 민간 영역에 무리하게 뛰어들어 물의를 빚는 책임도 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앞으로 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경도골프장을 공공 수익사업 실패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상 최악 청년실업 해소 특단의 대책 없나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 동안 계속 증가세를 보이더니 결국 9%를 넘기고 만 것이다. 청년 취업난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10명 중 1명이 무직이라니 참담할 따름이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실업자는 39만 7000명으로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이 9.2%에 달했다. 이는 2014년보다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1999년 실업자 분류 기준이 변경(구직기간 1주→4주)된 이후 최고치다. 하지만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현실까지 감안한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이처럼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는 학업·시험 준비·가사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 있던 청년층이 직장을 찾기 위해 경제활동인구로 대거 편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재학·수강

인구가 전년에 비해 14만6000명 줄었고, 가사 인구가 4만5000명 감소했다.

문제는 이 같은 ‘취업 빙하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 등에 매달렸지만 최악의 고용지표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전망을 어둡게 한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 위축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악재로 작용하는 데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정년 60세로 연장되면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등 일자리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미루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몇 기업은 하루빨리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청년구직자들도 하여금 언제까지 창업에도 관심을 갖는 등 도전정신을 발휘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無 等 鼓

생애 값던 아들 목숨이 눈앞에서 스러지자 님 잃은 아버지는 자수지 주번 나뭇가지에 목을 맨다. 아들이야 살기 싫어 세상을 등진 것이지만, 평생 장종보옥(掌中寶)처럼 아끼던 아들을 잊지 못한 아버지는 자식 눈·코·입 한뼘이라도 더 만져 보려고 울가미에 목을 들어 민다.

아들과 아버지는 한 날 한 시에 목숨을 던진 자수지 가에서, 육신은 없을지라도 혼백이나마 서로 만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만나면 올 것인가, 웃을 것인가. 도대체 만날 수나 있을 것인가. 죽은 후의 세상이 있을 것이며, 서로 같은

동반 자살

차원에서 존재할 수나 있으려나. 부모가 먼저 죽으면 자식은 부모 시체를 끌어 앓고 울 뿐이겠지만,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따라 죽기까지 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저세상에 대한 의심도, 자식 사랑 앞에서는 깃털만큼 가벼워지는게 바로 부모다. 그래서 더욱 처참한 것이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는 ‘동반 자살’이다. 희망을 품어야 할 새해 벽두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들 소식을 잇따라 들려온다. 지난주에는 광주에서 60대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으로 정상적인

삶을 꾸리지 못하는 아들과 함께 자수지에서 동반 자살했다. 또 전남에서는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차에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해 모두 숨지기도 하는 등 우울한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다.

동반 자살 사건이 일어날 때면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종속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거나 ‘부모라도 자식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곤 한다. 하지만 이는 살아남은 자들의 공허한

말일 뿐,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특히 평생의 동반자인 가족과 함께 죽음을 택한 차원에서 존재할 수나 있으려나. 부모가 먼저 죽으면 자식은 부모 시체를 끌어 앓고 울 뿐이겠지만,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따라 죽기까지 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저세상에 대한 의심도, 자식 사랑 앞에서는 깃털만큼 가벼워지는게 바로 부모다. 그래서 더욱 처참한 것이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는 ‘동반 자살’이다. 희망을 품어야 할 새해 벽두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들 소식이 잇따라 들려온다. 지난주에는 광주에서 60대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으로 정상적인

/홍형기 정치부장 redplane@

종교칼럼



조발그니
사산동성당 주임신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 뿐이다/누구도 앞서 가지 않은 길은 없다/오랫동안 가지 않은 길이 있을 뿐이다/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지 않지만/많은 이들이 결국 이 길을 갔다/죽음에 이르는 길조차도/자기 전 생애를 끌고 넘은 이들이 있다/순탄하기만 한 길은 길 아니다/낯설고 절박한 세계에 닿아서 걸인 것이다”

도종환의 처음 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체계는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한 달에 한번 글을 통해서 독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칼럼을 쓸까 내심 기대되고 설렙니다. 그리고 9년 만에 성당 주임신부가 됩니다. 외국에서 지내고 학교에서 지내느라 9년 만에 본당신부가 됩니다. 신부였지만 신부로 지내는 것보다 교수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본당에 지내는 것 역시 기대되고 설렙니다. 누군가는 그럴 것입니다. 누구나

기 고



정 영 상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

다사다난했던 을미년(乙未年)이 지나고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융합과 배려의 상징인 양(羊)의 해를 거쳐 이제 영리하고 재주가 많은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노사가, 그리고 나와 내가 하나라는 공동체 정신에서 화합과 상생의 단계를 넘어 이제는 원숭이처럼 영리하고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노사 상생의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었으며 청년, 비정규직을 위한 5대 노동개혁 입법을 위해 열심히 뛰었으나 최근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파탄 선언을 했다. 물론 1월 19까지 유보했으나 언론에서는 과거 수순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로 우리 경제는 올해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 274명이 본 2016년 대한민국

청년·비정규직의 눈물이 희망으로 바뀌길

경제 전망에 대해 전문가 10명중 4명은 우리나라가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저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빠져들 것”이라 본 전문가들까지 합치면 장기저성장을 예상하는 이들이 90%가 넘고 있다.

또 경제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향후 1~2년 내에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대 그룹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내년도 투자 축소 응답이 52%로, 투자 확대 응답(17%)보다 높은 것은 기업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응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우리 경제 위기에 올해 60세 정년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력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기업 입장으로서는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반대로 근로자는 기업의 이런 여건으로 인해 본인이 저성과자로 몰려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에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불합리성을 견어내고 노동시장 내의 공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여 줌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2대(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지침도 이러한 취지에 입각해서 추진됐다. 우선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용 가이드북은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인력 운영,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정정이 되는 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는 악용·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완비하게 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2대 지침을 사실상 새로운 법·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정부가 집행하고 노사가 그에 따라 적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즉 기준에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드는 것이므로 노동계에서는 주장하는 쉬운 해고, 쉬운 임금 삭감은 전혀 타당치 않다.

2대 지침은 노사 모두가 원원할 수 있는 안정장치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평가대상, 기준, 방법, 평가결과와 공개, 해고회피 노력 등 엄격한 해고절차 규율이 포함되는 성과중심의 인력운용 가이드라인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부당해고 사례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정년 60세가 지켜지도록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정년 60세의 무화에 따른 사업장, 근로자 모두의 안전장치가 돼 줄 것이다.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주요 노동시장 규범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작아 정규직 고용

유인을 저해하고 불합리한 비정규직 규제는 더 열악한 고용형태를 불러왔다.

5대 입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목록지 않다. 이럴 때에 2대 행정지침은 노동시장의 공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여 정규직 고용유인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보호강화를 통해 중간단계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현재 약속된 것일 뿐이고 고용구조 악화를 반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다.

이제는 5대 입법 및 2대 지침 마련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가 확대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노동개혁이다.

필자는 지난 6월에 지청장으로 부임하여 지금까지 제일 기억에 남고 안타까운 두 개의 스토리가 있다.

나이가 들어 2년 마다 새로운 직장을 옮기는데 있어 더 나은 조건으로 가지 못해 비정규직법이 개정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30대 중반의 여성 비정규직근로자, 그리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40대 중반의 간호조무사 근로자분의 눈물이 지금도 생각난다.

올해에는 정말 취약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의 눈물이 희망, 행복으로 바뀌고, 땅의 가치가 소중히 새겨지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FAX 227-0195)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월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